

수익성 악화돼 투자심리 위축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내수침체 영향으로 매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돼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종업원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4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중소기업 실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매출증가율은 내수판매 및 투자부진으로 2002년 9.6%에서 8.6%로 둔화됐다. 이같은 매출증가율 둔화로 수익성도 떨어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2년 5.01%에서 4.56%로 하락했으며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3.38%에서 3.17%로 낮아졌다. 그러나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부채감소 및 자기자본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차입금 등 고정부채 비중 감소로 부채비율은 173.67%에서 166.20%로 낮아졌으며 자기자본비율은 순이익증가로 36.54%에서 37.57%로 상승했다.

은행 중소기업 지원상품 잇따라

시중은행들이 경기회복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다양한 지원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외환, 한미 등 5개 시중은행들은 납품주문서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은 뒤 납품주문서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물품대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은행은 납품받은 대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 은행들은 전산작업과 함께 대출금리, 대출 가능범위 등 세부적인 운용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최근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돕는 '사이버(Cyber) CFO'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협동화단지 배정확대를”

개성공단 본(本)단지 분양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협동화사업용 공장부지 추가 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또 도금, 피혁 등 공해유발 업종을 중심으로 폐수처리시설 공동 설치 및 집적의견과 입주과정에 서 받게 될 불이익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됐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같이 요구했다. 박영기 농기계조합 전무는 “농기계 생산 조합원들이 중국진출 논의를 접고 개성공단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동력원을 비롯해 부속작업기 등 연관부품 업종까지 동반진출하기에는 배정된 협동화단지가 작다”고 지적했다. 강현수 귀금속가공업연합회 전무는 “업계 특성상 금융기관의 기업평가기준이 현실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며 “이러한 기준으로 개성공단 입주여부를 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수 피혁조합 전무이사는 전·후방 연관산업이 개성공단에 같이 진출해야 성공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해유발 업종을 한 단지 내로 집적시켜 공해처리 시설을 공동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 창업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장설립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조합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 인·허가 중 시·군에서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

오는 12월부터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된다. 시·군·구청장이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면적은 3ha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의결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에 맞춰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용 공장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하며 중소기업이 창업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짓는 공장에 적용된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 확보차원에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물리는 부담금으로 현재 1㎡당 1만300~2만19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12월께 공포된 뒤 신청이 접수된 전용허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면적도 현행 1ha 미만에서 3ha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지전용을 통해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의 허가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시·도가 농지전용 허가를 갖는 농지면적은 현행 1ha이상 10ha미만에서 3ha이상 10ha미만으로 축소된다.

中企 선호도 20대가 가장 낮아

20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모순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국회 산자위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20대가 32.3%로 가장 낮았다. 또 30대(34.7%), 40대(40.8%), 50대 이상(49.1%) 등으로 조사돼 연령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56.2%, 30대 46.4%, 40대 43.2%, 50대 이상 40.0%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자녀나 주변 친지에게 직장으로 권유할 기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2.2%가 공기업을 꼽았고 외국계 기업(25.7%), 대기업(24.0%), 벤처기업(9.7%)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으나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8.1%로 가장 낮았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물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6%가, 대기업에 대해선 40.8%가 각각 ‘그렇다’고 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 中企 러시아 진출 돕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러시아로부터 산업기술을 도입

하거나 시장진출, 합작투자, 기타 전략적 제휴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기업간 산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10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소재 시베리안 어코드(Siberian Accord)와 체결한 중소기업 업무협력 약정에 따라 시베리안 어코드의 니콜라이 아포나소브(Mr. Nikolay Afonarov)를 산업협력관 자격으로 11월27일부터 12월12일까지 초청 근무토록 해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투자·교역을 증진하는데 협력의 초점을 두고 우리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중진공 관계자는 전했다. 협력기관인 시베리안 어코드는 시베리아 19개 지역의 비정부 연합체로서 이들 지역의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등을 추진하는 대내외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협력관으로 초청되는 니콜라이 아포나소브씨는 국내기업과의 협력가능 러시아기술과 기업 소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도입·전문가초청 등을 상담해 주고 러시아투자환경과 러시아기업과의 교섭 및 애로해소 지원 등 산업협력 방안을 중진공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자 3명 중 2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국내 재해자 3명 중 2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산업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5만8333명, 질병 6753명 등 6만5086명이며, 업무상 사고자 중 1071명, 질병자 중 979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재해자 6만9960명과 사망자 2154명에 비해 각각 8.6%(4874명), 4.8%(104명)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재해자는 5인 미만 기업에서 1만4095명, 5~49인 기업에서 3만198명 등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모두 4만4293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1118명으로 전체의 54.5%에 달했다.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수가 520만명으로 전체 1071만명의 48.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재해자나 사망자 비율 모두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올 3분기의 평균 재해율은 0.61%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7%보다 0.06%포인트 낮아졌으나 일부 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중소기업 협력사업 자금 지원

대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산업기반자금의 30%를 협력사업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는 업체당 50억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 환경애로 해소 적극 대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환경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지난달 2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협의회는 기협중앙회 장지중 상근부회장과 환경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20명,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실장, 실·과장 8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상시 협의체로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환경부는 내년 초 발효돼 중소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예상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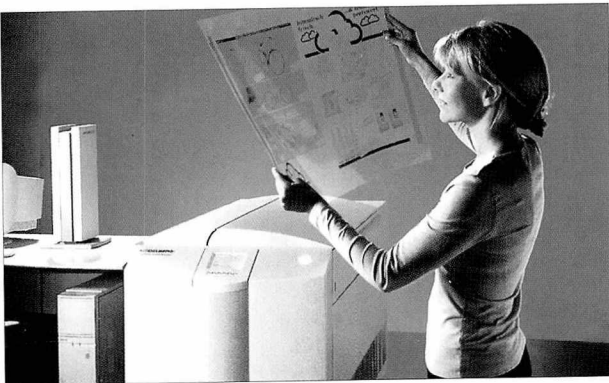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인여행카드 있으면 중국 무비자

앞으로는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만 소지하면 중국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1월11일 APEC ABTC를 소지한 기업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수속 레인을 통해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BTC 소지자의 입국 사전 승인 절차를 APEC 권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ABTC를 발급 받은 기업인은 사증 없이 중국에서 1회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ABTC 가맹국은 한국, 호주, 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브루나이, 일본, 페루,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등 14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무협이 사무국을 맡아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카드를 신청하려면 소속 기업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ABTC 참가국과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나 이 국가들에 대한 직접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하며 무협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 시외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입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프리프레스장비